평등해야 안전하다

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때 2016년 6월 14일(화) 오후 2시~5시
곳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부. '여성혐오살인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사회_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제

"국가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타리 (장애여성공감)

"안전, 권리로 말하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종합토론

2부. 살기 위해, 평등을 향한 제안

사회_ 이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여는 제안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정혜실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더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지원 (강남역 10번출구)

종합토론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

평등해야 안전하다

중첩된 혐오를 넘어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때 2016년 6월 14일(화) 오후 2시~5시
곳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부. '여성혐오살인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사회_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제

"국가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타리 (장애여성공감)

"안전, 권리로 말하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종합토론

2부. 살기 위해, 평등을 향한 제안

사회_ 이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여는 제안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정혜실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더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지원 (강남역 10번출구)

종합토론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

1부
‘여성혐오살인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발제 1.
국가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타리/나영정(장애여성공감)

1. 희생자와 피의자, 모두를 타자화하기

2016년 5월 17일, 한 여성이 강남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당했다. '여자 아무나'를 죽이려고 기다린자에 의해서. '찬란한 유언장' 활동을 하면서 명확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죽음의 명예와 관련된 위계였다. 희생자는 20대 초반 여자 A였다. 경찰과 언론에 의해서 여전히 그 희생자는 '여자 아무나'였다. 그보다 살인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단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희생자보다 피의자가 더 명예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둘 모두는 타자화되었다. 한명은 '여자 아무나'를 통해서 역사와 맥락이 지워진 단지 희생자로, 또 하나는 정신병에 걸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젊은이였지만 '청년세대'로 호명되지는 않는, 씻지도 않고, 주거불상, 서비스업에서 알바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이로. 그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피해자에게는 꿈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이 비판을 받았다.

이 특수한 피의자가 부각된 이후, 각종 국가의 대책은 이 특수한 피의자에게 맞추어졌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희생자 여성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결국은 국가에 의해서, 국가에게 곧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된 강남역 포스트잇 행동은 여성혐오 사회를 부정하는 국가, 특히 경찰과 일베를 비롯한 극우행동파들에 대한 비판과 대항활동으로 나아갔고 희생자는 내팽개친채 타자화된 피의자와 '남성일반'을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남성들과 싸웠고, 여성혐오를 전체 혐오 안에 종속시키려는 관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흐름은 메갈리아, 그리고 그 이전의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젊은여성대중'의 움직임과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목도하면서 많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흐름을 맞이하면서 들뜨고 각성된 상태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동참하고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정신장애인당사자 조직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신보건법 개정과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안이 헌재에서 논의중이라는 시기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두 번의 정신장애인 관련단체 주최 토론회를 통해서 무동기범죄가 사회적 범죄의 성격을 띤다는 것, '묻지마범죄자'가 대개 사회적 빈곤을 경험하며 독거, 일용직, 주거불안, 가족관계 단절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많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복지에서는 제외된 채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병리화의 대상으로서, 결국 범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2. 치안국가를 향한 ‘책임 없는 권한’ 확대

정부는 6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6/1 발표)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법무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경찰청)
* '17년도 총 5,493개소 설치 예정(설치예산 604억 협의중)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16. 6), 입법절차 진행(’16. 7~)
*현행 분리설치 의무대상(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이상) 범위 확대 예정,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예방적 치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경찰청)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6월)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전개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사범, 데이트 폭력사범 등

2.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보건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질환 의심자의 흉기소지·폭행 등 위해 위험→긴급성 인정, 응급입원 조치, 체포된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신병 확보 상태 그대로 행정입원 요청

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 '14.4월 19대 국회에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 및 전담 치료지원팀 모니터링 등 외래치료명령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 입원 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 요청 (1년 이내)
** 사회복귀시설은 전국 333개소에 불과, 이 중 52%는 수도권에 편중

3.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법무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음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추진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4.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법무부)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하여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경찰청)

5.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법무부)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개발 및 보급 추진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6. 양성평등문화 조성(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방통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

1)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음.

2)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접근은 배제함. 결국 정신질환 자체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치료거부는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3)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 결국 CCTV로 수렴

4) 경찰의 범죄예방진단팀
: "범죄·인구사회학적·물리적 환경 등 범죄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한 후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치안 컨설턴트'의 업무 수행. 이번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이후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계획. 이 법은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치안주체임을 명시하여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나 범죄예방정보를 요청하고 나아가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예방·참여치안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경찰의 입장에서 그만큼 절실한 법안이다"(6/9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주최_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 경찰의 권한강화를 통한 치안국가 형성의 의도가 다분히 보여짐.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결국 비상벨, CCTV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사회학적인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은 결국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경찰이 '치안컨설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장화, 치안의 시장화를 엿보게 하는 것임. 사회구성원들을 치안주체로 호명함으로써 시민적 권리보다 공공질서 유지를 더 중요한 가치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5)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등

주점화장실에서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7)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방실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해소를 목적으로 촬영한 '화장실 몰카'의 경우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이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48648

: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어차피 상가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법적용의 대상이 아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지 않는 경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무관함과 동시에,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범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억압적인 정책이 됨.
: 남녀를 분리한다고 해서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대책을 세움으로써 문제의 대책과 책임을 성별분리 자체에 두는 것. 이것의 효과는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에 들어맞지 않는 이들 자체를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무엇이 범죄인가라는 정의를 해체하는 방식임. 성별구분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 그것 자체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가? '출입'과 엿보기, 몰카 유포, 물리적 폭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함.

6) 예방적 치안활동, 범죄취약요인을 집중 신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 국민제보 신속대응팀,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 발굴, 여성불안 가중하는 주요범죄(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사범, 데이트 폭력사범 등) 강력 대응
: 이러한 키워드들은 텅빈 기표임과 동시에 치안국가로의 강력한 의지

7)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
: 학교와 교사의 역할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과정, 알코올중독 문제가 왜 포함됐냐는 문제제기에 "알콜문제는 정신질환 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가정폭력이나 자해 자살 많은 부분이 술과 연관된다. 알콜중독 관련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다."라는 복지부의 답변. 알코올이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알콜 중독 대책을 세움으로써 알코올을 범죄화하는 효과. '중독'이 왜 문제인가. 중독이 결국 문제시되는 집단은 중독으로 인해서 노동하지 않거나 가족부양 등을 하지 않아서 '가정해체'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계층이 타겟이 됨. 사회적 의무와 연관되지 않은 '중독'은 문제시되지 않음.

8) 행정입원(정신질환 의심자의 흉기소지·폭행 등 위해 위험→긴급성 인정, 응급입원 조치, 체포된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신병 확보 상태 그대로 행정입원 경찰이 요청하면 의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응급입원은 발견자가 경찰+의사에 의뢰하면 정신의료기관장 결정), 체크리스트(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 외래치료명령제(입원 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 요청 (1년 이내))
: 행정입원의 문제는 경찰의 요청이라는 점에 있음. 자해 혹은 타해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아니라 국가가 판단하고 요청한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가져올 인권침해가 있음.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임의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체포 단계에서 정신질환자인지 여부가 왜 중요한가? 피해자의 요청에 집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서 정신의료기관의 권한 또한 확대되었음. 그간 경

찰과 병원이 공모하여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강제했던 관행에 대한 평가 없이 병원의 권한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 비대상자)”,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
: 동의 없는 약물치료의 인권침해/가중처벌, 실효성 의심

9)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 검찰권한강화에 초점, ‘무관용 원칙’은 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질서, 치안유지에 있다는 것을 비춰줌. : ‘수사과정에서 엄벌’??
: 경찰이 의사의 역할을 자처. 의료의 경찰화/치안화 우려.

10)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보드미’ 개발 및 보급)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 심리치유 앱, 넘나 웃음이 남.

1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 방심위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없다. 범죄피해자 성별통계 구축 등은 논의되지 않고있음. 살인피해자 외에 치사 피해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끝에 사망한 경우 ‘치사’로 분류되는 경우 많기 때문.

3.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크게 세 가지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1) 엄벌주의
: 특정 대상, 계층으로 타겟화, 치안을 위한 권한 확대, 치안의 시장화, 치안의 의료화
*신자유주의 형벌정책에 주목할 필요. “경제국가 소멸, 사회복지국가 약화, 형벌국가 강화”

[가난을 엄벌하다], 로익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발췌) 사회복지와 형벌 제도를 연계한 치안 정책은 점증하는 사회 불안 및 그로 인한 하층 계급의 불안정한 상응, 응징하는 정치 프로젝트. 국가 임무 수정과 관련: 경제 싸움터에서는 물러나고 국가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벌 업무를 늘리는 것. 형벌국가 기조는 ‘자유시장, 개인의 책임과 의무, 가부장적 가치’라는 미국 신자유주의 3대 덕목

의 강조 아래에서 탄생.
미국의 치안은 투표권이 있는 중산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 만취, 난동, 구걸, 풍기문란, 단순위협, '집없는 부랑아들이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 등 미미한 소란에도 즉각적으로 경찰을 투입하는 것.
〈톨레랑스 제로〉 정책의 본격화. 범죄와의 전쟁, 공공장소 재정복 등의 프로젝트.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불안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을 추궁하는 과정엣 국가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2년간 복장, 걸음, 태도, 특히 얼굴색만 보고 검거, 체포한 자가 4만 5천명. (4천명만 체포 혐의 입증) 이 정책의 타겟은 노동시장에서 빌려나고 복지국가에게도 버림받는 빈민층.
'모성적 복지국가 대신할 부성적 형벌국가 옹립': 이는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경찰 업무와 결합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 또한 사회복지 후퇴와 상응하는 것.
대량구속과 치료명령은 재정부담을 높일 것, 민간교도소는 각광받는 산업이 됨.
전과 경력 때문에라도 사회 복귀가 안되는 빈민들은 길거리 자본주의의 동력인 불법 밀매(마약, 매춘, 장물 은닉)에 계속 몸담음으로써 범죄 시장과 감옥 시장은 맞물려 승승장구
'감옥-복지-상업 복합체'는 막 탄생한 자유 형무국가의 선도자. 그 임무는 새 경제 질서에 상응하지 않는 인구를 감시하고 구속하며, 필요하면 처벌하고 무력화하는 것. 형벌 우선은 우선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원조 및 후원 감독은 이 남자들의 여자와 아이를 대상으로 함. 국가차원의 도덕적 재무장, 그러지 않으면 탄압과 낙인찍기 두 가지의 융합.

2) 병리화
: 결국 정신장애인 수용정책. 정신장애인 일반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에 들어가고,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것 자체로 범죄화효과

3) 피해자(선별적)보호주의
: 차별해소, 평등추진과 관련없음. 왜 피해가 발생하는가 질문없음,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접근하지 않음. 폭력예방, 피해자 지원이 여성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분야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으로 설정된 폭력예방, 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역능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질문하게 됨.

4.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가는 현재 혐오, 증오범죄를 판단할 능력이 없음. 또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오범죄로 규정했을 때 사회적 정책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가중처벌에 그치게 되는 상황, 또다시 엄벌주의 효과만 남을 우려. 한편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규정했을 때 정신질환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감형 논의로 그칠 우려. 사회적 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으로 규정하든 국가주도의 수용정책으로 흐를 우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매개로 해서 얻고 싶은 목표는 국가가 차별과 혐오, 증오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유엔에서 권고하는 목표에 따라 (진보적 인권정책을 관철시키는 유력한 정당이 나오기 전까지....) 행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매개로 한 운동은 '좁게' 보면 국가에게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시키고 관철시키는 과정일 것.

발제 2.
안전, 권리로 말하기

미류(인권운동사랑방)

1. 그녀가 죽었다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추모의 행동이 이어졌다. 애도의 말들은 목숨을 잃은 그녀를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우리 안의 무언가가 함께 사라졌음을 고백하고 절규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고백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에 기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로 명명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는 외침이다. 그래서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다. 여성혐오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억울하게 죽은 이를 위해,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다. 경찰은 '여성혐오'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언제나 그랬듯 권력은 구조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화한다.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살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의자가 여성혐오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피의자가 범행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조차,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여성혐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 글은 여성혐오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사건 현장을 찾아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성혐오'로만' 보지 말자는 말은 여성혐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이해의 부족만은 아니다. 여성혐오야말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여성혐오와 안전을 대비시키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성혐오'는 발화주체들이 권력을 겨누며 저항하는 말이고, '안전'은 권력의 꽃놀이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여성혐오 사건들을 다뤄온 권력의 접근 방식이다. 강남역 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 기존의 틀과 단절을 선언했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틀은 어떤 것인가.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모색은 이런 출발선에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말은 여성이 안전할 권리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은 인권의 언어가 되기 어려웠다. 생명, 자유, 안전의 가치는 근대 인권담론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90년대 중반부터 '국가안보'에 붙들린 안전 개념을 비판하며 '인간안보' 담론이 사회보장 영역까지 확장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적 '안전' 담론은 또

다른 옷을 입고 인권을 억압하는 위험한 말이 되었다. 인권운동이 안전을 권리로 말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다. 절박했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내놓을 정책이 뻔히 내다보였고(실제로 그랬고) 그대로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음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안전할 권리를 말하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섬세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간안보는 안전을 삶의 안전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안전을 말할 때에는 우선 신체의 안전(physical integrity/safety)에 초점을 맞춘다.)

2. 정부의 안전 대책, 문제를 심화시켰다

강남역 여성혐오살인 사건 이후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6.1.)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정신질환 및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그동안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있을 때 발표했던 대책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공중화장실 분리나 포털사이트에서 혐오표현을 자체 필터링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세부 내용에 차이를 보일 뿐이다.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국가형벌권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3월 일산에서 10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후 일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였고 4월 〈아동 여성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2012년 8월에는 나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납치된 후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해 9월 정부는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2013년 6월 정부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그동안 대책이 개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면 이 대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제' 추진되었다. 2015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대책들마다 주요 내용은 한결같고, 그때마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인권침해 우려만 높아진다는 비판 입장을 밝혀왔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대책들마다 헛발질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 당하는데 '사각지대'로 시야를 한정시키듯 정부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폭력/범죄를 일탈적 사건으로 축소 규정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한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켰다.
첫째,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안전이 달성된다는 환상을 주입시킨다. 신고된 성폭력 중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 80%에 달한다는 통계는 알려지지 않는다. '낯선' 가해자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들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 낯익은 대다수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정주의가 발휘되며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에는 노골적으로 가해자가 보호된다. 일상에서든 법정에서든 사회적으로든.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이거나 홈리스이거나, '배제하기 쉬운' 존재일 때 그것이 안전의 문제로 등극한다. 형벌 포퓰리즘이 강화될수록 구조적 폭력도 강

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무시된다. 이때의 가해자들은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정상성'을 구현하므로 오히려 피해자 유발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여성이나 아동은 '피해자'가 되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피해자'가 되기 위해 여성은 '보호받을 만한' 존재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여야 한다. '꽃뱀'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거나, 장애여성이나 아동은 '저항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안전할 권리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다.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비난당한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속내는 다른 걸 노리고 있는 거야." '피해자'는 다른 의미에서 다시 배제된다. 그녀들은 피해에 대해서 말할 것을 강요당하는 반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차단당한다. '목소리 큰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의 대상이 된다. '범죄취약계층'이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그/녀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하다'('때려도 된다')고 사회가 승인하기 때문에 그/녀들이 취약해진다. 정부의 안전 대책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여성을 밀어내는, '보호'의 외피를 입은 혐오일 뿐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그 대책들도 마찬가지다.)

3. 안전이 인권의 언어일 수 있을까 물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법질서와 안전을 강조해왔다. '국민행복'은 '법치와 안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번 대책을 낸 기구도 '법질서 안전 관계장관회의'다.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인신의 구속에 거리낌이 없으며 심지어 정당도 해산시키는 국가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세운 '안전'은 또 다른 맥락에 있다. 집회시위가 예전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시민 대 집회참가자의 구도) 진압한다.
'법질서 정치'는 전 지구적 흐름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됐고 복지는 후퇴했다.(혐오가 사회적 현상이 되는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삶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들은 범죄로 인한 위기를 과장하고 불안을 이용해 분할전략을 구사한다. 특정 집단을 '위험'으로 간주하여 배제한다. 위험한 집단은 언제나 소수자였고 그/녀들은 단속당하거나 추방되었고 강제퇴거되거나 구속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소수자혐오에 기대는 동시에 소수자혐오를 부추겨왔다. 안전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안전을 권리로 요구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되었다. 인권운동은 수년째 토론을 이어가며 전전긍긍했다.
세월호 참사를 마주했을 때도 그랬다.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안전'에 대한 토론이 길어졌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만)을 어떻게 지킬지 궁리하는 것으로 쉽게 귀결되어왔다. 위험은 언제나 낯선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정해진 경계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기 위한 최선책이었다. 안전을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타자'를 배제하는 것은 손 쉬운 선택이 된다.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동시에 공포와 불안은 더욱 커진다.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오히려 회피하기 쉽다. 개인이 손댈 수 없는 거대한 문제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 의존하는 것으로 불안을 달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일깨운 안전에 대한 감각은 달랐다. 정해진 경계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안전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낯익은 구조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안전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거니와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을 권리로 말해야 했다. 권력이 말하는 영토와 재산의 안전이 아니라, 억압과 불평등의 질서를 지탱하기 위한 안전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우리의 권리로서 안전을 말해야 했다.
참사 2년이 되던 날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1]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4조(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곳곳에서 진행된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저마다의 경험에서 길어올린 권리의 실마리들을 내어준 덕분이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과정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들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누구도 속지 않는다. 안전산업을 육성해 안전을 더욱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규제완화를 포기하지 않는 아집을 그냥 두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혀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참사를 목격했으며, 메르스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참사 등에서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는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2]" 가고 있다.

4.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정부가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과정과 다르지 않다. 먼저, 그들은 원인을 다르게 지목하고 문제를 축소하거나 왜곡한다. 초기부터 정부여당에서는 '사고일 뿐'이라는 해석적 부인에 나섰다. 마치 유병언이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듯 반상회까지 소집하며 유병언몰이에 나섰고 종편들은 그의 '이상행각'을 연이어 보도했다.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규정했지만 구조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해경은 123정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기소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다. 참사 초기부터 낡은 배를 들여와 증개축하고 과적을 일삼았던 사실은 비난의 대상은 되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되지 않았다. 세월호의 화물 고박을 맡았던 업체의 부회장은 20대 총선에 여당 공천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둘째, '순수한 피해자' 운운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배제한다. 희생자 가족들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손 잡아주지만, 농성을 하고 집회를 열면 '불순한' 것으로 규정하고 음해했으며 피해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했다.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참사 초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막말과 비방글들이 많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전문 셋째 단락
2)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후문

고 나서던 즈음부터는 조직적인 음해와 혐오 선동이 시작되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싸우는 피해자들을 보상 더 받으려는 이익집단으로 몰아가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는커녕 진상규명을 거부하며 배보상 절차를 서둘러 끝내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

셋째, 정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탄압한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엄포를 놓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아왔다.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는 철저하게 탄압되었다. 여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공안기구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모여서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불온시하고, 그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혼자 슬퍼하며 우는 것만이 '순수한' 추모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권리를 도모하는 것을 억압한다. 권리의 주체인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토의하며 행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민주주의가 불순한 것이 되어버리고 안전은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가 되어버린다.

선언은 "평등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 안전을 위한 길[3]"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재난참사의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안전을 해치는 것은 위험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난참사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권력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핵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핵마피아 세력은 핵을 안전한 에너지로 둔갑시키고 숱한 사고가 발생해도 핵발전은 포기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잦아지고 대형화되지만 피해의 발생은 불평등에 기인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만 덮친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빈곤층(주로 흑인) 밀집지역에 발생했다. 더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마찬가지다. 직업병을 포함해, 용광로에 빠져서 맨홀에 빠져서 전철에 치어서 죽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있다. 이윤을 위해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자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국가는 누군가의 죽음을 '경제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만들며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선다. 변화가 유예될수록 위험은 더욱 불안정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권력이 이런 구조를 지탱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불평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

불평등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신자유주의는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이것은 '위험', '안전'을 전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위험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찾아드는 것처럼, 안전은 사회 전체가 안정될수록 획득되는 것처럼 몰아간다. 누구의 안전이 더 위협당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하나의 '안전'으로 문제를 설정하며 내부의 불평등을 은폐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성소수자 괴롭힘은 없다. 성소수자 학생은 오히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찍힌다.

5. 우리가 안전할 권리를 외쳐야 한다

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 좁게 이해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구조적 폭력에 무력한 언어일 수도 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도 비슷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때는 강한 힘을

3) 4.16인권선언 제안문,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2015.4.14.

발휘하지만 이름도 없이 스러진 수많은 사회적 타살들까지 생명권의 감각이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권이 가진 힘의 근원은 권리의 목록에 있지 않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사회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외침이자 명령이다. 권리의 여러 이름들은 우리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실마리일 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말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안전을 말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디선가 홈리스들에게 미니 텐트를 배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홈리스들은 텐트를 오히려 불편해했다. 박스집을 만들 때는 바깥을 살필 구멍을 만들어놓는데, 구멍이 없으니 바깥 상황을 알 수 없고 위험에 대비하기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위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을 피하고 줄일 수 있어야 하며, 제압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권리를 넘어 우리 스스로 행동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의 침해는 언제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안전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소수자일수록 위험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절실하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강제퇴거할 때 철도공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리스들은 오히려 범죄에 취약하다. 전문범죄집단에 의한 명의도용, 감금 등이 예사롭게 발생한다. 홈리스들이 노숙 장소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역시 동료와 안전이다. 게다가 국가는 정책적으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한다. 국제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홈리스를 단속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한다. 혐오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된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범죄도 몇몇 '혐오하는' 가해자들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사회가 그/녀들을 위험한 존재로 다루고 모욕하기 때문에 증오범죄가 가능해진다.

정체성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체성이 호출되는 역학, 그 정체성에 할당된 권리의 경계, 그 정체성에 허용된 말하기의 내용과 형식의 한계가 문제를 구성한다. 여성혐오에 대해 '나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무의미한 이유도 그것이다. 혐오는 남성이 여성을,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향해 쏟아내는 감정이 아니다. 혐오는 오히려 이런 구분된 위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힘-역학이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은 다른 것이기보다 차라리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혐오는 그냥 '감정일 뿐'인 것으로 보이지만 목숨의 부지, 생존의 유지, 삶의 긍지를 훼손한다.

'혐오 돌려막기'라는 저들의 전략에 맞서 우리는 '평등으로 가로지르기'를 감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게 되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을까. 지배권력은 우리를 분할하고 서로 다른 위치로 밀어낸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잘 듣게 된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해본 사람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평등으로 가로지를 수 있다. 평등해지는 만큼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다.

1부 종합토론.
속기록

- 최근 강남역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노동자의 안전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 여성 모두가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듯. 반도체 직업병에 한정되어 있던 안전이라는 좁은 이슈, 공감대가 넓혀지지 않았던 것이 이를 계기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듯함. 행동을 같이해야하지 않나. 강남역 8번 출구(반올림 농성장)에서 10번 출구를 또 구의역을 보면서 안전이 관리와 감독의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렵긴 하지만 많이 배웠다. 안전에 노동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왜곡되는 것이 느껴짐. 일반인으로서 안전을 말할 때 훨씬 더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가 쉬웠다. 어찌보면 억울하기도. 안전의 의미가 소극적으로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건강권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가 좋았다. 반올림 뺏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세월호 리본처럼 달아주시면 좋겠다.

- 타리님께 질문.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에 의원들의 의견도 포함되었던 것인지?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왔는지?
토론회 날 본회의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왔다갔다 했음. 남인순 의원의 경우 정신보건법 개정한 분이기도 하고 당사자 단체들과 교류가 있었던 듯 했고. 강한어조는 아니었지만 이 대책은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 정춘숙 의원의 경우 여성범죄 피해자 통계가 부가조사로만 되어 있었는데, 범죄를 분석하고 어디서 왜 죽는가를 통계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임을 말하면서 국가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국가가 페미사이드 와치를 해야한다. 제대로 된 통계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하였음.

- 안전이란 개념에 대해 고민했던 세월호 인권선언의 논의들이 궁금. 기존의 관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안전을 어떻게 주장해야할까? 가족 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했는지. 기존의 안전의 개념과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인권이 시작된 근대의 인권담론은 생명, 자유, 안전이었음. 제일 중요한 가치. 언제나 중요한 권리였음. 그 이후에 발전해오는 역사 속에서 왜곡되기도 한 것. 소유의 안전에 가까운 내용으로 더 많이 강조되기도.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안전'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음. 그러면서 내가 안전할 권리는 권리의 언어로 많이 쓰이지 않았음. 우리도 놓쳐왔던 것이기도. 세월호 참사는 뭔가를 자세히 보여줬다기 보다는 어떤 직관과 통찰을 주었음. 세월호 참사가 구조적 문제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몇몇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던 것. 가족들도 수학여행이나 선박 안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규제완화, 관피아, 기업의 이윤추구 등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물었을 때 그 답은 여전히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가진 실마리들이 있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노동안전보건 쪽의 경험들이었음. 끊임없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에서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고 은폐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세월호 참사를 들여다보는 돋보기가 되었음. 노동자와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모를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됨.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를텐데. 예를 들면, 삼성 직업병, 불산 누출 등에서 알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위험한지 모르고 대비할 수 없

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방사선 피폭 노동자 이야기처럼,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야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주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 앰뷸런스에 싣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음. 산업재해 통계에 안 잡히게 하려고 그런 것. 산업재해가 많아지면 기업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가 소수자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작동함. 노동안전보건은 사회적으로 산업의 영역에 갇혀 산업안전의 문제로만 다루었고,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조치만 해온 것. 그 틀 안에서 그들의 안전으로 얘기하니까 우리와 같은 문제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던 것.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분리된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비슷한 맥락. 이럴 때 안전을 권리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인권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100여회,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풀뿌리 토론 덕분이었음. 세월호참사 이후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냐를 질문하며 토론했음.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를 압축한 것이 선언. 그런 의미에서 계속 쓰여 가고 있는 중. 그럴 때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산업, 시민, 교통 등으로 나뉜 안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안전으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평등하게 가로지르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자는 말이기도 할 듯함.

2부
살기 위해,
평등을 향한 제안

2부 속기록
살기 위해, 평등을 향한 제안

-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해서 2부 순서를 마련했다. 발제자가 많은 관계로 5분씩 이야기 듣고 토론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지난 주말 올랜도에서 49명의 희생이 있었고. 혐오라는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데. 1부에서 이야기했던 안전이라는 말, 인권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무겁게 와 닿는 것 같다. 2부에서는 함께하자는 북돋음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 여는 제안을 할 사람들 소개 -

여는제안 1.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들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이어진 고민 속에서 장애 쪽 활동하면서 든 고민과 페북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때 페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타리님이 발제했던 것과 연관된 것. 여성 살인 사건 이후 대책들이 굉장히 불합리 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음. 특히 정신장애인 강제 행정입원 강화조치. 일부 언론이긴 했지만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음. 예컨대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것이 대검 자료 바탕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음. 결국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비판이었다. 이 사건이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의 범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팩트다. 정신장애 때문에 생긴 정신장애에 의한 범죄다라고 해석하고 몰아가는 것. 곱슬머리를 가진 사람이 곱슬머리에 의한 범죄라고 몰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먹혔던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인식이 일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되었던 것이 정신장애 강제 입원조치다. 여성혐오적인 맥락,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정신 장애인을 희생양 삼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정치권력이 찾아낸 희생양,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야기 되었다. 일정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를 넘어가는 국면인식은 필요하다. 이번 사건 이후 언론보도에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빈번히 달린 댓글 중 하나가 “제발 미친놈들 길거리 못 돌아다니게 정부가 좀 관리해라” 라는 것이었음. 단순히 희생양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강남역 사건이 여성혐오라는 맥락에서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경찰의 조치가 대중들 사이에서 쉽게 정당화되고 인정되었던 맥락은 정신장애에 대한 일상적인 혐오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 단순한 희생양 찾기를 하는 뻘짓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신장애인을 향해 저지른 또 하나의 혐오, 범죄인 것이다. 차별이 보편성을 가지기도 하고 각 집단별로 다르게 작용되기도 함.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혐오에 대한 양상이 다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디 안 보이는데 사라졌으면 좋겠다하면서 비가시화 시키는 것. 있지만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정신 장애인이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는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음. 한국의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율

이 70%가까이 됨. 보통 다른 국가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사회의 혐오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대응이나 인식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 첫 단계의 싸움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생각. 사건 이후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함께했음.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지금의 경찰이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혐오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하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음. 여성이나 소수자를 혐오하는 자신감을 주는 것. 공적인 권위를 갖는 공권력, 정부의 대책이 일베로 대표되는 혐오세력이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까지 나와서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 장애인 혐오인데 제대로 대응 안해가 아니라 전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로 투쟁해야.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에게 감각이 생겼다. 우리에게 생성되어야 할 감각. 여성 혐오가 있는데 장애인 혐오가 없는 사회? 가능할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이를 넘어서서 분할에 의한 통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여는제안 2.
쥬리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안전할 권리는 단지 목숨만 붙어있다고 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현장에서 안전할 권리가 죽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안전할 권리여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서 체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가 많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에서 많이 대책을 내놓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죽기 전에 구하자이다. 조기 발견. 초중학교에 몇 일 동안 나오지 않는 아동들을 찾아내겠다. 아동학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정책이나 상상력은 없음. 신고 의무자 문제. 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이 국가는 신고의무자 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여서 아동학대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 얼마 전 버스 광고를 봤는데,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라고 하더라. 주요 가해자 중 한명의 마음으로 신고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음. 또,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분이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때문에 연락을 해옴. 단체 이름으로 교장에게 공문을 보냄. 단 며칠의 사례만 기록해서 보낸 것. 매일 벌어지는 일이었고, 일상이었음. 그 때 교장이 보낸 답변 중 이런 말이 있었음. “몇몇 교사가 지나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체벌에 대해 지금은 법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금지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법만 바뀌었고 실제로 체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님. 체벌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개인의 윤리적 결함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음.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 또한 그 행위자는 개인일지라도 결함 있는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입을 막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순응적인 미성년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비청소년들이 입을 막고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임. 어떤 트랜스젠더가 혐오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성별표현을 못하고 억압당한 채로 다니는 게 안전할 권리가 지켜지는 상태가 아니듯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치마 짧다고 맞고, 공부 안한다고 맞고, 담배 핀다고 맞을 때. 그냥 치마 짧게 안 입으면 되고, 담배 안 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안전해야 안전한 것이다. 또, 길거리에서 겪는 폭력도 많다. 젊은 여성 같은 경우 길

에서 담배피면 훈계도 당하고 뭔가 무서운데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피우면 무섭다고 한다. 무서운 10대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가. 무서워서거든요. 어른들이 와서 때릴까봐. 모든 소수자가 양면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폭력의 희생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폭력을 저지를 것 같은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하기도 함. 뉴스기사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10대들"이라고 제목을 붙여 내보내곤 하는데, 보통 가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표기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40대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역시 요새 40대들이 무서워" 라고 반응하지는 않음. 하지만 10대가 범죄를 저지르면 무섭다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 애들은 맞아야 해라는 이야기가 나옴. 이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안전할 권리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 단지 목숨을 잃지만 않으면 보장되는 게 안전할 권리는 아닐 텐데라는 고민이 들고. 제가 여기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요새 고민은 체벌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들을 개인의 나쁜 엄마, 혹은 나쁜 교사의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으로 이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여는제안 3.
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저희 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 성평등, 소수자 차별과 혐오와 맞닿아있다고 이야기해왔음. 제가 이 단체에서 10여 년간 일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올드패션드 이슈로 이야기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평가받았음.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하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는 여자 때리면 안된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는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죽는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슬프고 분노스럽지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 이후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에 있지 않다. 또, 성평등 얘기 왜 하지 않느냐고 했음. 이번 종합대책을 보니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은 굉장히 갭이 크다. 국가가 지체현상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느낌.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행태가 저를 놀랍게 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정신 장애인에 대해.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대책도 틀렸다. 안심귀가, 택배 등. 저걸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옴. 저는 10시부터 1시 사이에 집에 안가니까 안심귀가 서비스 못 받음. 택배도 마찬가지 맥락. 여성폭력은 대부분 집안에서 벌어지는데 씨씨티비로 해결가능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지겹게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도 대책으로 내놓음. 손쉽게 하는 방법임. 처음에는 피해자유발론을 얘기함. 저 피해자가 밤에 다녔으니까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야하니까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식으로. 혼자 등산을 다녔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예전 올레길 사건 이후에는 호출기 같은 걸 달고 올레길 다녀라 하는 대책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도저히 피해자에서 원인을 못 찾으면 가해자의 특성을 찾음. 이번에도 정신 장애인을 다 잡아서 어디에 넣겠다? 이것은 너무 심플한 생각이다. 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텐데,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도 했다. 여자들한테 요강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기저귀차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발언했는데, 이번 사건이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니 조현병 환자 다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꿈이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는 신학생이었다면 왜 목사에 의한 범죄율은 찾아보지 않냐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위적임. 걱

정되는 것은 여성혐오, 소수자에 대한 혐오. 혐오가 우리 국가가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법률이 생겨도 무서울 것 같아. 정상으로 살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다 라고 문제제기 했을 때 동아일보에서 기가 막힌 칼럼을 써서 냈다. “편집증적인 매갈리아적 망상”?? 이 사건은 정신 장애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왜 자꾸 여성혐오라고 주장하냐는 내용이었음.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 등 굉장히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권력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성폭력 문제의 가장 어려운 것이 타자화 시키는 것. 피해당사자도 자기문제를 타자화하기 쉽고 남들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남의 문제로 인식하기 쉬움.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의 타자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시민들이 이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고, 내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가 지체현상을 겪고 있는데, 단체에서도 이 정도의 행동하는 시민들과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교육과 캠페인과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수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봤음. 다른 것으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소강상태이다.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받아 바꾸어 해 나가고 싶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부에서 피해자 부가조사 이야기 나왔는데, 토론회 때마다 계속 통계문제, 피해자 실태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부가조사하고 발표하겠다고 함.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함.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 활동의 목표나 전제가 될 수 있음. 각각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세분화 되어 계획이 세워져야 할 듯하다. 개별 이슈들에서 작게 성취해나가는 것이 있어야 차별금지법에도 동력이 될 수 있을 듯.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에 몰빵할 수는 없을텐데. 다각적인 면에서 추진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이 생겨도 잘 운영될 것인가가 굉장한 걱정. 법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 앞서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들도 법은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음. 법률은 법률이고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한다. 저희 캠페인 하나 소개해드리면, 먼지차별이란 말을 작년에 지어냈음. 마이크로어그레션을 한국말로 바꾼 것인데, 칭찬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일상의 언어부터 성찰하며 사용하자는 것이다. 당장 인권을 공교육에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여는제안 4.
정혜실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 네트워크) _자료참조

지난 번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혐오문제를 국가인권위 진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동력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너무나 불행한 사건으로 여성혐오를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장애혐오로 번지게 되어 슬프기도 하면서 이참에 혐오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 2015년 서울시 문제로 인해 혐오표현세미나를 각 영역에서 했었음. 법률가들 뿐 아니라 학자,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음. 그 결과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직 혐오표현에 대해 썩 공감을 가지지 않는, 몇몇에게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어째든 지금 이런 자리가 계기가 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부터 혐오 표현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영역의 확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추동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면서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2009년에

일어난 보노짓 후세인 사건을 인종차별 최초의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여러 진영에서 결합했었다. 보노짓 후세인 개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여성에게도 일어난 사건. 당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았고 인종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서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혹은 취업 등 장애차별금지법법과 비슷하게 가야하나 일시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후 이 문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에서는 인종이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이야기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자 몇몇 제정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이후 선거관련하여 무슬림 OUT, 성소수자 OUT 등 대놓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자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현상으로 보았다. 또, 중선관위에 한국 이슬람협회에서 문제제기 했음에도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사회가 혐오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마치 집단 대 집단, 혹은 종교적 갈등으로 비치거나 성소수자 집단을 향한 기독교인의 성정처럼 묘사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도 세미나에서 무수한 논란이 있었고, 법률가들에게는 자유권 규약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이야기해보면, 단지 싫어한다는 것을 넘어 서는 것. 혐오표현의 의도가 어떤 집단을 향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할 목적이 있고, 그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함으로서 많은 동조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 나치즘의 베이스에서 나왔기 때문. 이를 이해하지 않고 단지 혐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가 국제법상 얼마나 위험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실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어떤 범죄를 예측하고 어떤 집단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을 넘어서 범죄를 야기시키는가를 보고 있다.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남성 대 여성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됨. 한국사회에서 혐오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주민, 무슬람에 대한 혐오는 테러만 일어나면 계속 제기 되어 왔음. IS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 당사자들이 IS는 이슬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만큼 서로 공유되지 않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S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테러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테러 때문에 나간 것처럼 언론에는 꾸미고, 실제로는 미등록 체류자인 것 때문에 나간 것. 이런 방식으로 국민에게 어떤 집단을 혐오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오원춘 사건 계속 리바이벌 됨. 제 2의 오원춘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 수원시의 경우, 정책에 반영하면서 애니콜 서비스라고 하여 모든 주민이 감시하도록 함. 주민들은 누가 합법 혹은 불법인지 알 수 없는데 주민에게 경찰과 같은 역할을 주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 또 주민들도 하지도 않음. 결국 공포와 두려움만 주는 것. 내 옆집에 이주민이 살고 있으면 무섭다, 언제 내가 당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오원춘 사건에 대해 이주정책포럼에서 다룰 때는 이 사건은 가정폭력, 여성의 폭력에 대한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의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존재하고 있음. 어떤 국적의 사람이 한국 여성을 죽이려고 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님.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최근 극동방송의 경우 경악스럽다. 무슬림 남성들을 이야기하기를 한국여성을 낚으려는 무슬림 남성의 포획의지라 표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얼씨구나 결혼하는 것은 아닐텐데. 개별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지금까지 여성 폭력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가 미군이면 양키고홈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 집단적 폭력을 당하는 것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특별히 위안부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로만 환원되어

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 전쟁에 굳이 여성들의 몸이 남성들에 의해 침탈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몸을 대리하는 것. 히잡도 마찬가지. 히잡 쓴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프간을 공격했지만 실제로 그 여성들이 이야기했는가. 이것이 주체적인 목소리여서 누군가 억압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공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시리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감추고 무슬림을 혐오하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한 나라를 전쟁터로 만드는데 모두가 동조하고 공모한다. 프랑스 테러사건 이후 엄청난 추모가 일어나지만 시리아 난민이 한국에 왔는데 1,000명 중 3명만 난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인도적 체류 비자만 줌. 이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아랍어 밖에 쓸 줄 모르는데, 학교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함. 국가가 어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처리하고 있다. 심지어 홀로 온 남성 28명은 테러리스트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묶어놓고 있었다.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간과하기 시작하면 실제는 겉으로 드러난 두려움과 공포만 확산될 뿐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최근 네팔 노동자 자살 3건 이상 있었다.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차별받는 현장, 노동현장에서 인간대접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 베트남 노동자들의 경우 이를 자체 공동체에서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러할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도움을 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어야 가능한 것이다. 안전한 노동, 정당한 임금, 정당한 사람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새삼스럽게 구의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혐오에서 평등을 이야기 한다면, 빈곤, 노동에 대해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빈곤한 대상에 대해 쉽게 차별하고, 소외된 사람들, 노동현장 맨 밑바닥에서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죽어도 값어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등해야 안전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인격체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하지 않는가. 나도 여성이지만 내 여성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여성들 안에서도 계급적 차이가 있다. 화이트칼라 혹은 블루칼라, 예쁜지 혹은 못생겼는지, 살이 쪘나 빠졌나 등 모든 상황들에 대해 일상적인 차별에 빠져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혐오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는제안 4. 자료

이주민 2백만인 다문화시대, 짙어지는 인종차별적 혐오문제

정혜실[4)]

한국사회에서 혐오의 문제 특히 이주민을 향한 혐오의 문제는 최근에 들어 기독교 자유당의 선거공약으로까지 공공연하게 선언됨으로써, 이주민의 한국사회로의 유입 이후 최대 최악의 지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과거의 2009년 한국사회에서는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으로 불리는 인종차별사건으로서 성인종차별공동행동이 꾸려진 일이 있었다. 당시의 이러한 사건은 차별금지법이나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시점에서 형법상의 모욕죄라고 하는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이 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으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버스 안에서 한국인 여성과 동승한 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귀가하던 성공회대 연구교수였던 보노짓 후세인을 향해 한국인 남성이 반말과 욕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로 동승했던 여성까지 공격했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언사는 일반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의 부족과 인종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무감각과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어난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혐오표현은 종교 갈등을 빙자한 집단 대 집단이라는 대결구도로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한 특정 집단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을 향해 의도적이고, 차별선동적인 형태로서 대중을 향해 왜곡된 정보와 사건을 유포하고, 이러한 혐오표현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지켜봐야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가가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미 대중매체인 공영방송을 통해 이름 꽤나 알린 목사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니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서울시 시청 앞에서는 무슬림들이 성경처럼 읽고 있는 꾸란의 일부구절들을 악의적으로 발췌하여 실음으로써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얼마나 성차별적이며, 사회에 위협이 되는 무서운 종교인지를 알리는 내용으로 가득한 전단지를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들은 무슬림만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사회의 소수자이자 약자이며 자기권리를 아직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집단들을 향해 그러한 혐오표현을 서슴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수자와 같은 그룹이다. 혐오표현(hate speech)의 범주는 괴롭힘(harassment)과 차별선동 또는 증오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괴롭힘은 특정 개인(들)에게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차별선동이나 증오선동은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구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차별 또는 폭력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5)]

---

4) 경계를 넘는 아시아여성들 네트워크(TAW 네트워크), 이주민방송 MWTV 대표

5) 앞의 2)의 p199 참조, 김지혜(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法曹 9. vol.708, pp36-77에서 차별선동이란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 즉 선동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차별선동의 직접적인 청중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아니

(서울우리신문, 2016년 4월11일 기사, 박태순 기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선거공약 홍보물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공공연한 혐오표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어떻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할 기관에서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기독교방송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극동방송은 “한국의 이슬람 2편: 무슬림 남자들의 먹잇감 – 한국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극동방송 60년 창사 특집 연재[6]를 실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그것이 종교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분석한 기사는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와 그 종교를 가진 자들을 사기꾼에 협잡꾼으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한국여성을 무슬림과의 결혼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로 피해자화하는 성차별적인 혐오표현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9.11 테러이후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이 2015년 일어난 파리테러와 최근의 벨기에 테러 사건과 한국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IS 깃발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그 장시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된 것이다. 테러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사람들은 묻고는 했다. 왜? 서구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슬퍼하고 그 일을 저지른 이들을 향한 무차별보복은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동시대에 그러한 테러를 일상으로 겪어온 시리아인들과 아프리카 약소국들의 고통은 외면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리아에서 난민들을 위험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700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주저하며, 겨우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 지위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28명의 남성 시리아인들이 홀로 입국을 하여 난민신청을 시도하였다고, 입국과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공항에서 반년 째 제대로 식사 제공이나 편의시설 없이 구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테러에 대한 공포조성은 난민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를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대중은 테러라는 두려움과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그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혐오를 극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라, 그 집단과 분리된 다른 편에 소속된 사람들과 주요한 정책 결정권자들이라고 한다. (중략) 또한 나머지 대중을 동원하여 집단의 권리를 빼앗고 집단적 분리와 분열을 이용해 배제외 소외, 폭력, 불이익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6) 2016년 4월 20일 극동방송 60 특집 연재 http://m.blog.naver.com/febcweb/220688837170

무엇보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들의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우려를 일반 대중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감염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이 저지르는 실제 범죄들은 공포를 넘어 혐오의 일상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한 이주민 단속과 규제의 정당화로 이어져, 실제 이주민의 삶을 구속하는 정책과 법적 제재로 체제화 된다는 것이다. 소위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중국동포의 살인사건[7]과 관련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주민 혐오표현을 통한 차별 내지 증오선동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과 수원이라고 지방자치정부 그리고 한양대라고 대학생들의 축제 현장으로 이어져 그것이 다시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환원되어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재생산 되었었다. 그리고 2012년 일어난 오원춘 살인사건은 2013년 용인모텔 살인 사건과 2014년 박춘풍 살인사건이 경기 남부에서 일어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주민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8]. 이런 과정에서 문화와 팩트 그리고 추측과 억측이 모호한 설명 속에서 기정사실로 둔갑하게 되고, 혐오조장을 위한 자극적인 묘사가 절정을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기사를 통해 전문가의 말을 빌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분석에서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이 잔혹범죄가 일어난 배경이 된다는 설명이 결국 이주민의 밀집지역과 범죄를 연결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고정관념을 확신시켜준다는 문제가 있다.

오원춘 사건을 빌미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주목을 받으며,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함께 수원시민과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폭력의 형태 즉 성폭력과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해결의 지점을 찾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해자 당사자가 중국동포라는 점으로 이주민의 범주로 확대되면서 수원시의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검거 그리고 추방이라는 일련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일들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는 일반시민의 불안한 안전을 자극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주민을 적대시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토막 살인이라는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이것이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그것은 'Any Call'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장 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

7) 2012년 4월 10일 박상기 기자, 조선닷컴<[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 사건] 시신 280 토막 냈는데 초범?... 전국누볐다는데 다른 희생자는?> 오원춘은 중국 네이멍구 출신으로 세상에 알려진다. 이러한 이주민의 범죄는 이주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면서 이후의 살해사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0/2012041000008.html

8)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기남부지역은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됐으면서도 약간만 외곽으로 나가도 야산이나 서해안과 같이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보니 잔혹한 범죄들이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외국인과 외지인 등 인구 유입이 많다는 점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지역과는 달리 잔혹 범죄가 일어나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은 넓은데 치안력은 적다보니 범죄를 저지르는 입장에서도 '경기남부지역이라면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사법적 해이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2012년 4월 10일 박상기 기자, 조선닷컴<[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 사건] 시신 280 토막 냈는데 초범?... 전국누볐다는데 다른 희생자는?> 오원춘은 중국 네이멍구 출신으로 세상에 알려진다. 이러한 이주민의 범죄는 이주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면서 이후의 살해사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0/2012041000008.html

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 거주지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으며,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자체까지 위반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은 커녕 인권 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통구와 권선구(잘사는 지역)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 지 모르는 거야." 라는 식의 혐오표현을 했다는 것이다.[9] 이렇듯 이주민의 범죄가 이주민혐오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혐오표현을 통한 차별선동 내지 증오선동을 위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이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 실제 이주민의 삶을 위협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기사 내용에서의 전문가 발언, 일반게시판이나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한 혐오표현을 통한 선동 그리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통치리더인 수원시장의 혐오표현(hate speech)들이 이렇듯 여과 없이 발화되고 정책에까지 반영되어도 지금 어느 하나 법적 제재를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혐오의 시대인 것만 같다. 이러한 혐오는 여성이든 장애이든 성소수자이든 이주민이든 약자들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지도 않으며, 우린 서로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친구와 이웃 그리고 주민으로 연결되어있다. 서구 유럽은 자유권규약을 통해 혐오표현 즉 영어로 Hate Speech에 대한 엄격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혐오표현관련 연구세미나가 서울시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있어왔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상의 언어 속에서 쉽게 발화되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였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 오고 기독교자유당의 출현이 확실시 되면서 드러난 종교 갈등의 외피를 입고 시작된 혐오표현의 수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는 반드시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부각시켜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의 반대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언어적 폭력성 즉 혐오표현의 쉬운 발화여서는 안 된다. 우린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미 다문화국가이다. 나의 기준만으로 타인을 판단할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 그리고 그 다양성에서 비롯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법조인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하며, 이것이 자칫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까 우려했다. 그러나 이주민의 삶을 보면, 가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 혐오표현의 수위는 일반인도 종교인도 정책입안자도 높여가고 있는 데, 이주민은 어떠한 대응도 쉽지 않은 피해자만 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피해자들이 늘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 또한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어서 차마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인 것이다.

9) 2015년 8월 21일에 있었던 이주민정책 포럼에서 <수원시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성찰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안기희의 발표 참조

여는제안 5.
더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지난 토요일,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연중의 가장 큰 혐오의 퍼포먼스를 보고 왔다. 소수자의 운신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전에 버스를 탔는데 한 정류장에서 몸집이 큰 여성이 탔고.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하나도 닿지 않았다. 그보다 체구가 작은 남자일지라도 옆자리에 앉으면 닿기 마련인데. 소수자 혹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들의 운신이 이렇게 좁다. 퍼레이드 현장에 있으면서 혐오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소수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소수자의 운신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좁은 곳에 속박되어 있구나 참혹하고 비극적이지만, 같이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오늘 이렇게 혐오와 강남역, 안전에 대한 논의를 부탁받고 들었던 생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국가나 경찰이 사실은 강남역 사건에 대한 원인을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경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문서에 기재할 때 그 경위 하나가 조현병이 기재되었을테니까. 원인을 찾지 않고 경위에서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니 그게 대책이 될 수 없다. 원인은 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낼 수 없다. 그 분의 집을 털어서 그 집에서 무슨 여성혐오 실천학이라는 책을 발견할리도 없고. 원인은 가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고 구조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여성혐오가 문제다라는 제안은 정확히 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였음. 국가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패한 의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정치, 힘을 보여주는 어떤 작업이다. 여성이라는 소수자가 그것을 성취해낸, 앞으로도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현명하게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계기를 마련해낸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제도화된 메시지를 넘어서 올란도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어제 성소수자 함께 추모제 진행했다. 이후 어떤 단체의 성명을 보았다. “이것은 동성애 혐오가 아니라 오바마가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이간질 하려는 제국주의적 계략이다.” 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제 추모 집회에서 이슬람 나가라 이런 구호 나온 적 없고, 좀 성명서의 수신자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식의 원인, 성격규정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같이 고민해나갈 때 성소수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슬림이어서가 아니라 (IS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민자 2세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성애 혐오 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그런데 왜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인들의 적의가 왜 하필 소수자에게 향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동성애 혐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과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소수자들의 참여, 추모, 애도, 원인을 파악하려는 열정들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논의 또한 우리 쪽에서 혹은 내 페북 타임라인에서 보였다는 것이 좋았다. 그런 논의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그 기분. 우리가 누군가를 적대하거나 적개심으로 이것을 재생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어떤 신뢰감, 안전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랑 누릴 수 있을까가 고민되는 지점이다. 또, 드리는 제안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해보면 2007년에 법무부가 6,7개 차별사유를 삭제했었음. 병력, 고용형태, 성적지향 등. 다시 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게 삭제되었을까. 새삼 복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계속 숨기려고 하고 차별하려는 존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떠들 수 있겠다. 국가나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차별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들춰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곱씹어지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지개행동 집행위에 어려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다. 혐오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

자끼리 벌어지는 범죄, 살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벌어진 토막살인의 경우 남성에게 대가를 지불한 성매매성, 혹은 성적 친밀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관계에서 돈을 주지 않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한 사건. 이것이 혐오 때문에 벌어진 안전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또 얼마 전에 게이 남성들이 다니는 찜방에서 계속 추행하는 어떤 남자를 구타해서 죽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혐오를 경유하지 않고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다. 찜방, 동성 간의 성관계 등 그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 이런 것들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것은 계속 혐오만 이야기한다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는 답답함이 있다. 또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보이게 할 것인가. 경찰? 국가? 저희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답답하고. 그래서 성소수자의 혐오와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어떻게 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여는제안 6.
이지원 (페이스북 강남역 10번출구)

강남역 10번출구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다.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페이지 소개를 먼저 드리겠다.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18일) 만들어졌다. 18일부터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 장소에 가서 19일에 촛불을 들자는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이후로 활동을 이어갔던 페이지다. 19일부터 27일까지 강남, 홍대, 신촌 등지에서 반여성혐오에 대한 자유발언대 진행해왔다. 6월 6일, “여성혐오 세상을 뒤엎자” -반여성혐오,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모두의 공동행동이라는 집회를 진행했었다. 집회를 처음 만들어봤고, 많이 부족했지만 고민지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을 때 저와 이 페이지를 만든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음. 우리 사회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여성의 안전, 혐오가 이렇게 다수 대중에 의해 포스트잇이라는 방식으로 공론화, 드러나는 것이 낯설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많은 나의 동지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었음. 사실은 기존에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대학생, 친구들 회사원이고 이 포스트잇을 붙인 주체들도 기존의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도 아니다. 페미당당에서는 거울행동, 불꽃페미액션 밤길걷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강한 액션을 취했다. 민우회가 신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여성단체연합,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등등 같이 우리 사회 한국 여성폭력의 현주소라는 내용의 집담회를 진행하시기도 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저희의 고민지점들은 이렇게 많은 다층의, 그동안 서로 접점이 있었을까 싶은 여성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 여성혐오의 맥락에 있었던 범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의 진단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두 번째 고민지점은 혐오에 맞서는 것이 단지 여성혐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했다. 6월 1일, 여성범죄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문제이니 정신장애인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대책들이 나왔다. 공용화장실의 문제다라는 대책도. 이것이 여성혐오의 맥락을 소거하고 이 혐오를 다른 소수자성에 대한 혐오로 재생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했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이 이 의식에 대해 포스트잇을 붙인 주체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 역시 여성혐오의 문제를 장애인 혐오로 돌려막기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동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퀴어퍼레이드 갔을 때, 피켓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페이지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 성소수자혐오를 없애고 싶은 사람들, 여성, 장애인 혐오를 없애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등장한 이 새로운 주체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부분 겹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다. 이 목소리들, 혐오에 저항하는 저항하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로 6일 집회를 진행했던 것이다. 여기 계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공동주최 참여해주셨다. 이런 제안을 드렸을 때 굉장히 흔쾌히 같이 하겠다 이야기해주셔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혹은 막연히 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혐오에 저항하는 공통의 연대를 만드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동주최, 공동후원으로 만난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앞으로도 활동과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오셨는데 이번 여성안전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내일 있는데 여기에도 함께 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이 있었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제 친구들 중 한 명은 우리가 그동안 여성혐오 사회가 열심히 바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가지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반성폭력 운동부터 다시 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친구는 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서, 성교육표준안 같은 교육의 문제-국가가 제시하는 표준안 바꾸어야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혐오언론대응을 하면서 해럴드 경제 헤드라인. 신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럴드 경제에서 말하기 어려운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내보냈다. 친구들이 가서 피켓팅하고 결국 사과를 받긴 했음. 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 기존에도 계속 00녀로 피해자가 소비되어왔고, 또 국민일보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광란의 부도덕한 내용인 것처럼 쏟아냈고. 언론이 혐오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전한 시민권은 결국 균형 잡힌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에서 소득이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 중에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화 노동들, 돌봄, 가사노동들에 대해 파업을 하자고 생각해봤다.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버리는 퍼포먼스를 해보면 어떨지. 지금은 축적되는 혐오에 대해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2부 종합토론

속기록

- 워낙 다양한 결, 중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고민들 폭이 넓었다. 우리가 연결되어 모여앉아 있는 게 아마도 어떤 전제처럼, 이 자리가 느껴지기도 함. 한편으로 여전히 막연하고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할 때라는 생각이 든

다. 혐오반대는 성소수자 운동에서 2007년 이후 계속 이야기해왔다. 혐오 반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그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이 말을 하면서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맥락들이 어떻게 다른지 배워왔던 시간이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도가 국가에 의해서 나왔다가 어떤 차별 금지 사유들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맥락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평등을 이야기해야 하고, 차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혐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 닿으려고 했었던가, 라는 고민이 최근에 들었음. 이 사건을 보면서 혐오를 조장, 용인,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국가와 상대하느라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평등교육강사협동조합 '와' 교육활동가 김선희 : 주로 학교, 공공기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내일 초등 교사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앞두고, 일주일동안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사건이 터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문제도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시작해서 맺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들을 고민하게 하고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고 싶은 욕심이 있음.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어서 반가웠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의 지점들을 넓히고 싶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고 넓게 갔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에 계속 함께 하겠음.

-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최근 느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며칠 전 라디오 시사프로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나름 진보적 성향의 시사프로그램인데, 진행자 여성이고 남성이 중간에 코너를 맡아서 이야기하는. 남성기자가 신안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흑산도 주민들이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지역의 문제가 아닌데, 사과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서 두 여성 앵커와 남성 기자 간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느끼고 얘기를 하다가 남성기자가 이것이 지역이 아니라 젠더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다. 너무나 정확한 해석인데, 그 여성 앵커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남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성 혐오도 반대하고, 남성 혐오도 반대합니다. 저는 그 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지향합니다." 라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여자야, 그런데 그것을 남성을 향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여성을 혐오하는 것 반대하는데 이것은 남성혐오니까 그것도 반대해. 마치 이 세상에 여성혐오와 남성혐오가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여성으로서 무조건 남성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반대해. 난 여성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여성과 남성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문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애혐오로 몰고 가고. 또한 올랜도 사건을 이슬람 혐오로 몰고 가는 것처럼 이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한편에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다. 가령 성소수자 혐오 반대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성애 중심사회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이성애 혐오자가 되는 것. 성소수자를 혐오하면서 왜 이성애를 혐오하니라고 왜곡되면서 지금 혐오담론이 부각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게 이상하게 꼬여지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혐오론자가 되는 것. 그렇게 혐오 담론이 아주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남혐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 남성의 남자만 꺼내도 남성혐오자가 되는 거예요. 강남역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혐오 담론

이 굉장히 어렵게 부각된, 한국역사에서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강남역 살인사건 정부대책 관련한 문제제기와 이후 운동방향에 대해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활동가 : 내일(6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있다. 경찰과 정부 대책 전면 재검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저도 여기 오는 길에 다른 활동가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뭘 맡기고 싶지도 뭘 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음. 그 대책들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든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더 빨리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의 대책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 해야할까가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당연히 차별금지법만이 해답이고, 이 법만 제정하면 다 되고, 여기에 올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하나로 될 문제는 아니다. 6월 6일 공동행동에도 사회를 뜯어고치자는 외침들이 굉장히 많았음. 사실은 그 정도로 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다른 모든 분들과 같이 더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가 더 많이 누군가를 벌할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를 통해 다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성취의 문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님. 혐오표현이 차별을 조장하고 그 자체로 차별인데, 차별이 무엇인지 이 사회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퀴벌레 싫은 것도 혐오, 성소수자 싫은 것도 혐오,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이것이 평등에 대한 문제이고, 평등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 언론보도에서 차별금지법, 혐오범죄처벌법 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든 범죄로 드러난 것들, 폭행, 살인 등은 그 양태만 놓고 봤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 단지 이 범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대책도 엉망인 것.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기본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 양형의 문제로 가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차별금지법 또한 성평등, 여성정책이다 라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서로를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

-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 혐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면서 감정, 도덕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남성혐오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우에노 치즈코가 남성혐오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듯이 혐오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이게 왜 혐오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을 빼야하나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여성혐오는 이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혐오에 맞서자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뒤집자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찾기 어려

워지는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다른 지형에서 세팅해보자는 차원에서 안전할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 안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말할 때, 범인을 잡아서 잘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매커니즘을 찾는 것 자체가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것일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이런 고민을 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TAW’네트워크 정혜실 : 남성 대 여성의 대결구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 더 유념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정체성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이주여성이면서 성소수자, 장애인이면서 이주노동자. 그런 것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이런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혐오받는지도 알아야 한다. 혐오표현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유럽에서 나온 툴킷이 있다. 무엇이 혐오이고 혐오표현인지 잘 정리된 것이 있으니 다같이 공유하고, 툴킷을 이용하여 한국 상황에 맡게 캠페인,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한국 여성의 전화 송란희 : 이 사건을 통해 자기안의 복잡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광장에서 만났다고 생각이 된다. 이 운동의 연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성찰이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은 거의 다 만났다는 느낌. 여성혐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된다. 5월 17일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여성혐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나니 이 단어가 오염되어 버렸음. 여성혐오의 대척점은 개인의 문제,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되어야하는데 엉뚱하게 남성혐오로 가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근데 여성혐오가 뭐야 비밀스럽게 물어보기도. 혐오의 개념들을 소수만 알고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기점으로 잘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이 상태로 잘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혐오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하는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도 잘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노들장애인야학 김도현 : 한겨레 칼럼에서 정희진 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한 듯하다.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했던 지점인 듯하다. 이미 왜 여성 차별하느냐고 말하면 남성들은 왜 남성 차별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차별이라고 할 때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일치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혐오가 지금 현상을 표현하는 적절한 지표일까, 특히 남성으로서의 고민은 00녀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50%의 남성들이 이 생각에 동의했다고 함. 대다수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단어로 대체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극혐’같은 단어처럼 대중적으로 시작되기도. 확산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고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또 하나는 내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대도 있고 전장연도 함께할 것인데 기자회견까지 가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단위들이 상호의식을 하면서 주고받고 있어서 이후 계획을 잘 정하면서 기자회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는지 표현할 액션도 필요하다는 생각. 구체적 행동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연대체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연합, 강남역 10번출구 등에서 먼저 제안해주시면 다른 단위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을까.

- 후속 계획까지 갖고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도 든다. 혐오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은 지겹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가 혐오에 대해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명확한 개념화를 통해 이해 속에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는 것. 정답에 정의가 있다기 보다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은폐된 방식으로 언어에 반영되는 것. 그런 혼란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 차별금지법 또한 다시 평등, 차별, 혐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다. 중요한 것은 명명을 그렇게 한 반응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터져 나온 외침들을 듣고 조응하는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생각. 추후에 구체적인 어떤 운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서 추진하겠다.